



07-33 (통권 264호)

2007.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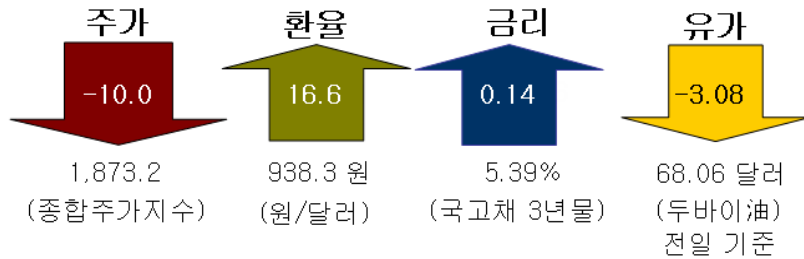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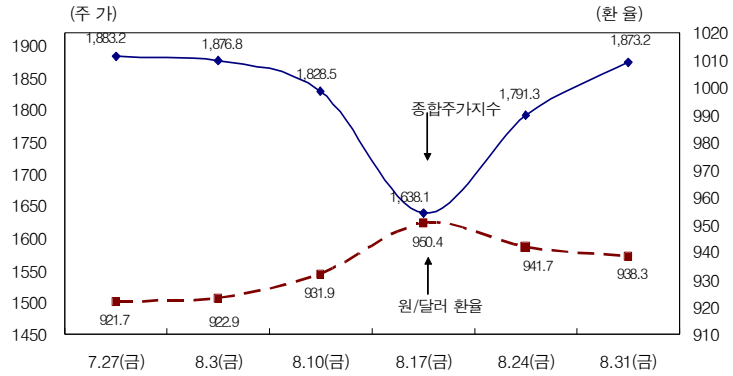
# 韓國經濟週評



■ 한국과 OECD 국가간 주요 재정 지표 비교와 시사점

Better than  
the Best!

月間 主要 經濟 指標 (7.27~8.3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한국과 OECD 국가간 주요 재정 지표 비교와 시사점	1
월간 경제 동향	22
□ 실물 부문 : 7월 경상수지 16.4억 달러 흑자	22
□ 금융 부문 : 금리 상승 속, 주가 및 환율의 급등락	2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 거시경제실 : 강 대 창 연구 위 원 (3669-4457, dkang@hri.co.kr)

# Executive Summary

## □ 한국과 OECD 국가간 주요 재정 지표 비교와 시사점

### 1. 문제 제기

최근 전통적으로 사회 보장 정책의 비중이 높은 주요 유럽 국가들이 과도한 복지 지출에 의해 성장이 둔화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은 재정지출 규모가 복지 지출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사회보장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 통일 시대에 대비한 통일비용 지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의 재정 지출 확대가 미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2. 최근 한국의 재정 추이

**(재정지출 규모의 확대)** 최근 한국의 재정 추이를 살펴보면, 첫째 통합재정지출의 對 GDP 비중은 1995년 18.0%에 불과하였으나, 증가 추세를 지속하여 2006년 현재 24.3%를 기록 중이다. 특히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 속도가 GDP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 흑자폭 축소)** 둘째 경제성장세가 위축되어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통합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흑자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06년 현재 통합재정수지가 소폭 흑자(관리 대상수지는 1.3%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상당 부분 '미래에 지급할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는 GDP 대비 2.7%의 적자로 추정되어 진다.

**(국가채무 증가)** 셋째 경제 성장 속도보다 과도하게 빨리 재정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채무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채무의 對 GDP 비율은 2000년 19.2%에서 2006년에는 33.4%에 이르고 있다.

**(국민부담률 상승)** 넷째 국민연금제도 등이 확대됨에 따라,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1990년 18.9%에서, 2006년에는 26.7%에 달하고 있다.

**(복지 부문 재정지출 증대)** 우리나라의 재정 확대, 재정수지 흑자폭 축소 현상의 주된 원인은 복지 부문의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복지재정지출 규모는 2002년 37조 9,428억 원에서 2007년 61조 3,849억 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총지출 대비 복지재정지출의 비중은 2004년에 22.5%에서 2007년에는 25.9%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나아가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20.6%)

### 3. 주요 재정 지표 국제 비교

OECD 국가들과 한국의 국민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첫째 외형상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만 이는 회원국들 대부분이 전통적으로 사민(社民) 사상이 강한 유럽형 선진복지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의 비유럽형 선진국가들과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최근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담률의 빠른 증가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 성장에 이용될 수 있는 자원이 축소되어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 다만 이러한 부담률 상승 추세는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IMF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이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3%(2005년)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9%(2004년)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재정수지 흑자는 2006년 현재 GDP의 0.4%로, 지금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가부채비율도 2005년 현재 30.7%로 미국 61.8%, 영국 46.7%, 일본 173.1%보다 낮을 뿐더러, 경쟁국인 대만의 36.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과거 OECD 국가들의 국민 소득이 현재 한국의 수준과 비슷한 시기의 국민부담률을 비교할 경우, 역시 한국의 부담률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상 OECD 국가들 중 90년 이후 1인당 GDP가 1만 8,000달러(현재 한국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의 도달 시점을 비교해 보면, 역시 이들 국가들이 대부분 유럽 지역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수준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만 8,000달러 도달 시점 5년 동안 이들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대부분 감소했으며, 증가한 경우에도 한국의 증가폭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 4. 정책적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급격하게 증가하는 복지재정지출 추이와, 급속한 고령화 속도, 통일 비용 문제 등 한국만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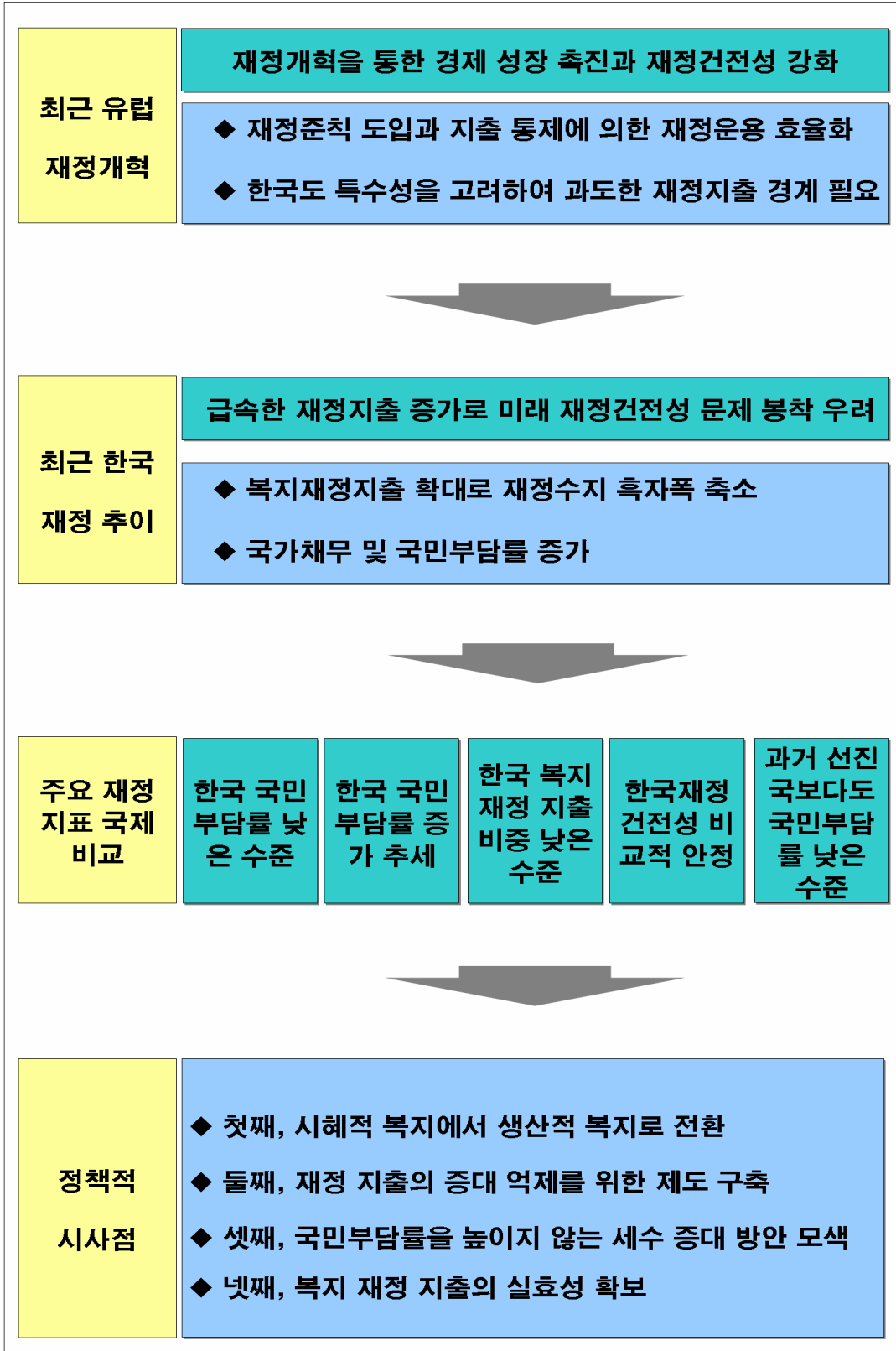
향후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첫째** 복지 정책의 방향을 '시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 등 성장 동반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SOC 투자 확대, 신산업 육성, 연구개발 투자 등 미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대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총재정지출에 일정한 상한선 강제, 중장기 재정 지출 계획들을 재검토 및 우선순위 재선정 등이 요구된다.

**셋째**, 국민부담률을 높이지 않으면서 세수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을 통한 세수기반 확충이다. 그리고 탈세(지하경제) 및 국세 체납을 축소를 위해 세무인력 확충, 탈세고발시스템 점검 등 국세 행정력 강화도 필요하다.

**넷째**, 복지 재정 지출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 지출 분야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복지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바우처 제도의 도입 확대와 같은 전달 체계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과 OECD 국가간 주요 재정 지표 비교와 시사점 >



## 1. 문제 제기

-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정책의 비중이 높은 주요 유럽 국가들이 최근 과도한 복지지출에 의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유럽 국가들의 재정지출 중 복지재정지출의 비율을 보면 2004년 기준으로 프랑스 61.9%, 독일 86.9%, 스웨덴 52.6%, 영국 52.5%를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참고 > 최근 유럽 주요국의 재정개혁

- (영국) 1990년대 이후 재정이 악화되면서 경제가 불안정해지자 1997년부터 재정준칙<sup>1)</sup>을 실행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 이에 따라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이 줄어들고 재정수지도 흑자로 전환하는 등 재정건전화 성과를 거두었음
  - 그 결과 1997~2006년의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8%로, 유로지역 평균 성장률 2.2%를 상회하였음
- (프랑스) 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한 후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세율인하를 추진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경직된 시장규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비효율성 등으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됨
  - 재정운용 면에서 프랑스는 2002년부터 4년 연속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상한(GDP의 60%)을 위반하고 1994년 이후 EU 재정준칙<sup>2)</sup>을 지속적으로 위반함
  -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 인원을 축소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재정적자비율을 1.5% 이하로 정부부채 비율을 60% 이하로 억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독일) 메르켈 총리가 취임한 후 2004년부터 기존에 추진해온 경제구조 개혁을 지속하여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면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증대하는 등 경제성장이 호조를 나타냄
  - 재정적자가 2002년부터 4년 연속 EU 기준 3%를 초과함에 따라 2007년 초에 독일 정부는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부가세율을 인상하였으나, 우려와는 달리 금년 들어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함

1) 정부부채 수준을 GDP 비율 40% 이내로 유지하고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공공투자를 제한한 경상지출 목적의 정부차입 금지.

2) GDP의 3% 재정적자비율 상한과 GDP의 60% 국가채무비율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도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사회보장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통일 시대에 대비한 통일비용 지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음
  -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를 초과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냄<sup>3)</sup> (2050년에는 38.2%로 세계 최고령 국가 전망<sup>4)</sup>)
  - 보육 비용의 증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합계출산율은 1995년 1.65명에서 2006년에 1.13명으로 하락하였음
  - 이에 따라 사회 전체의 고령 인구 부양 부담 정도를 의미하는 고령부양비는 1995년에 8.3%에서 2006년에 13.2%, 2050년에는 72.0%를 기록할 전망이다

< 저출산 인구 고령화 추이 >

(단위: %, 명)

	고령인구 구성비	고령부양비	고령화지수	합계출산율
1995	5.9	8.3	25.2	1.65
2000	7.2	10.1	34.3	1.47
2006	9.5	13.2	51.0	1.13
2010	11.0	15.0	67.7	-
2020	15.6	21.7	125.9	-
2025	19.9	29.1	169.1	-
2050	38.2	72.0	429.3	-

자료 : 통계청.

- 주 : 1) 고령인구 구성비는 전체인구 중 고령인구(65세이상)의 비율.
- 2) 고령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의 비율.
- 3) 고령화 지수는 유년인구(0~1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의 비율.
- 4)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의 가임기간(15-49세)동안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 3)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95년에 1.65명에서 2005년 1.08명(세계 최저수준), 2006년 1.13명으로 감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이 소요되었으나, 한국은 단지 18년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4) 고령화사회(高齡化 社會, Aging Society)는 총인구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 고령사회(高齡 社會, Aged Society)는 동 비율 14% 이상, 초고령사회(超高齡 社會, Post-Aged Society) 또는 후기고령사회는 동 비율 20% 이상으로 정의됨. UN 추계에 의하면 2025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27.3%, 스위스 23.4%, 덴마크 23.3%, 독일 23.2%, 스웨덴 22.4%, 미국 19.8%, 영국 19.4%임.



- 무엇보다도 한국만이 처한 특수한 상황인 분단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통일 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KDI가 1991년에 추정한 바로는 통일을 위한 재정부담은 1990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10년간 2,632~2,73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반도 통일 비용 추정 비교 >

연구자	주요가정	추정비용	개념
KDI(1991)	▶독일식 통일 ▶2010년 북한지역 1인당 소득수준이 남한의 60%	2,632~2,736억달러 (1990년 불변가격)	재정부담
신창민(1992)	▶독일식 통일 ▶2010년 북한지역 1인당 소득수준이 남한과 동일	1조 7,700억 달러 (1990년 불변가격)	총투자
안두순(1992)	▶독일식 통일 ▶2000년 북한지역 1인당 소득수준이 남한과 동일	① 241조 5,000억원 ② 360조 3,000억원 ③ 275조 8,000억원 ④ 251조 7,000억원 (1990년 불변가격)	총투자
배진영(1993)	▶독일식 통일 ▶2010년 북한지역 1인당 소득수준이 남한과 동일	4,480억 달러 (1990년 불변가격)	총투자
이영선(1993)	▶점진적 통일 ▶1990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남한지역의 1인당 소득수준이 같아지는 시점에 통일 ▶기회비용개념 이용	① 8,418억달러 ② 4,430억달러 ③ 7,183억달러 ④ 3,880억달러 (1990년 현재가치)	재정부담 및 민간투자
박태규(1995)	▶독일식 통일 ▶각 항목별 소요지원액 합계	초기 5년은 남한 GDP의 8.67~11.29%, 후기 5년은 7.47%	재정부담
골드만삭스(2000)	▶독일식 통일	7,700~3조 5,500억달러	-

자료 : 한반도와 통일문제 - 한반도 문제의 재조명, 박광기 외, 대왕사, 2002, p.165.

주 : ①은 남한 고성장, 북한 저성장, ②는 남한 저성장, 북한 고성장, ③은 남한 저성장, 북한 저성장, ④는 남한 고성장, 북한 고성장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비용.

-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미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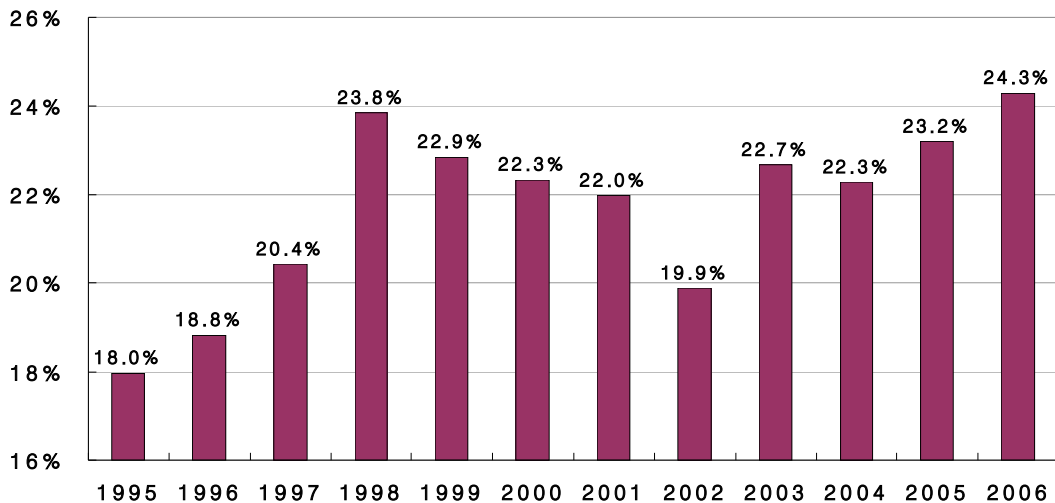


## 2. 최근 한국의 재정 추이

### 1) 한국의 재정 추이

- 최근 한국의 재정 추이를 살펴보면,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국민부담률과 국가 채무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 재정지출 규모의 확대 : 우리나라 통합재정지출의 對 GDP 비중은 1995년 18.0%에 불과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지속하여 2006년 현재 24.3%를 기록중임
  -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의 경우 23.8%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경기 불황에 따른 GDP 감소에 대응하여 일시적으로 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임
  - 특히 2005년 이후의 경우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을 크게 앞지른 것이, 재정지출의 대 GDP 비중을 높인 것으로 판단됨

< 통합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율 >



	1995	1998	2000	2002	2004	2006
통합재정지출 / 명목 GDP	18.0	23.8	22.3	19.9	22.3	24.3
통합재정지출 증가율	18.6	18.8	6.9	-0.5	5.6	9.6
명목 GDP 증가율	17.2	9.5	9.3	10.0	7.5	4.6

자료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주 : 통합재정지출은 세출과 순융자의 합으로 세출과 총융자의 합인 총지출과 다름.

- 재정수지 흑자폭 축소 : 경제 규모 (세수)가 뒷받침되지 않은 가운데 재정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흑자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냄
  - 외환위기 기간의 재정수지 적자는 경제 규모가 급격하게 축소되었고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그러나 2002년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GDP의 3.3%에 달했던 재정수지가 점차 축소되어 2006년 현재 0.4%에 이르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재정지출만 빠르게 증가한 데서 발생하는 현상임
  - 특히, 현재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이는 상당 부분 '미래에 지급할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2006년 현재 GDP 대비 2.7% 적자로 추정됨
  - 또한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통합재정수지에서 공적자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 중 국채로 전환된 부분을 조정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GDP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 통합재정수지의 對 GDP 비중 >

(%)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통합재정수지
1995	0.3	-1.1	-1.1
1996	0.2	-1.4	-1.4
1997	-1.4	-2.6	-2.6
1998	-3.9	-5.1	-5.1
1999	-2.5	-3.9	-3.9
2000	1.1	-1.0	-1.0
2001	1.2	-1.3	-1.3
2002	3.3	0.7	0.7
2003	1.1	0.1	-1.7
2004	0.7	-0.5	-2.0
2005	0.4	-1.0	-2.5
2006	0.4	-1.3	-2.7

자료 :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주 : 1)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기금, 산재보상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의 흑자분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임.

2) 관리대상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통합재정수지에서 공적자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 중 국채로 전환된 부분을 조정한 수치임.

- 국가채무 증가 : 재정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채무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국가채무의 對 GDP 비율은 2000년 19.2%에서 2006년에는 33.4%에 달하고 있음 (공적자금 상환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006년말 현재 27.1%)

< 국가채무의 對 GDP 비율 변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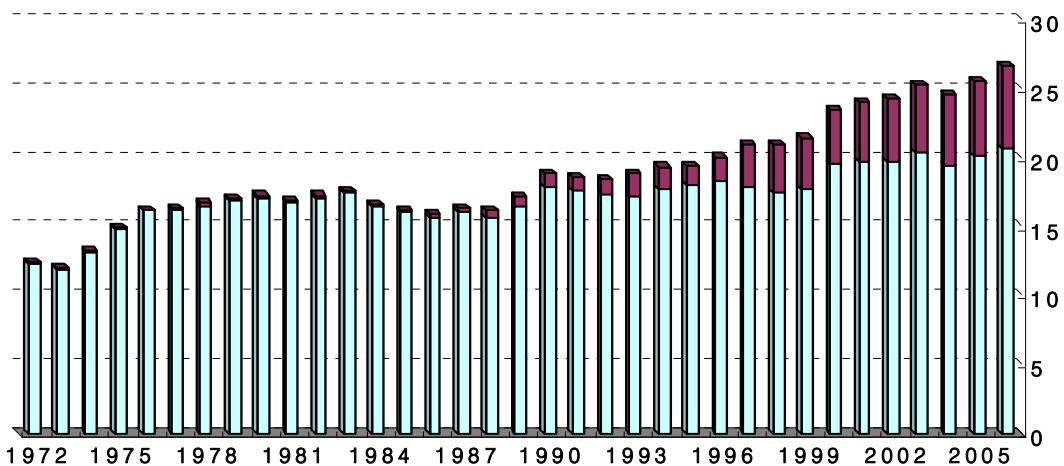
	1997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국가채무비율	12.3	19.2	19.5	23.0	26.1	30.7	33.4
공적자금상환 제외시				20.9	22.3	25.4	27.1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국민부담률 상승<sup>5)</sup> : 조세와 사회보장기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1972년 12.5%에서 1990년 18.9%, 2006년에는 26.7%에 달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국민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장부담률이 1990년 1%에서 2006년 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임
  - 조세부담율의 경우 1990년대 동안 17%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2000년 이후 급증하여 2006년에는 20.7%에 달하고 있음

< 국민부담률 추이 >

□ 조세 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율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으로 국민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총 부담을 나타냄. 이중 조세부담률은 조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사회보장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사회보장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사회보장기여금은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보험료 등으로 구성됨.

2) 우리나라 복지재정지출의 현황과 전망

○ (현황)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은 2002년 이후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지속중<sup>6)</sup>

- 복지재정지출의 증대 :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 규모는 2002년 37조 9,428억 원에서 2007년 61조 3,849억 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함<sup>7)</sup>
  - 이에 따라 정부의 총지출 대비 복지재정지출의 비중은 2004년에 22.5%에서 2007년에는 25.9% 수준까지 상승하였음
- 사회복지분야 지출 확대 : 분야별로는 복지재정지출의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보건 분야 지출보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빠르게 증가함
  - 「2007년도 나라살림」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의 25.9%에 달하는 복지재정지출 중에서 보건 분야는 2.2%p를 차지하며, 사회복지 분야는 23.7%p에 달함
  - 세부 부문별로 보면 보육·가족·여성 분야, 노인·청소년 분야, 보건의료 분야, 기초생활보장 분야 등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재정지출의 경직성 : 2007년의 경우 주택부문을 제외한 복지 재정지출에서 의무적 법정지출인 사회보험지출<sup>8)</sup>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함

6) 복지재정지출은 정부의 예산회계시스템에서 '사회복지 분야' 및 '보건 분야'로 분류되는 재정지출을 합하여 통칭함. 2007년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 속한 9개 부문(국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공적연금, 보육, 노인·청소년, 노동, 국가보훈, 주택 등)과 보건 분야에 속한 3개 부문(건강보험 지원,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총 12개 부문 재정지출로 구성, 기획예산처, 「2007 나라살림: 2007년 예산」, 2007.

7) 지출항목의 예산편제가 2002년 이후 크게 개편되어 2002년 이전과 이후의 복지재정지출 자료의 내용이 다르므로 2002년 이후의 자료만을 분석함. 또한 재정지출 기준이 2003년 이전 통합재정지출 기준에서 2004년 이후 총지출 기준으로 변경되어 2003년 이전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비중을 구할 수 없으므로 2003년 이전과 2004년 이후 시계열을 단순하게 연결하여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함.

8) 공적연금, 노동 및 건강보험지원 부문을 합한 33조 5,599억 원을 사회보험지출로 간주하여, 주택을 제외한 복지재정지출 47조 4,185억 원에 대한 비중을 계산하면 70.8%가 됨.

-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 보훈급여금 등이 법정지출이므로, 복지재정지출에서 재량지출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하여, 다양한 보건복지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 복지재정지출 구조 및 추이 (2002~07년) >

(단위: 조 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증가율
사회복지 분야 합계	-	-	39.4	47.0	50.5	56.1	17.3
기초생활보장	3.4	3.5	3.9	4.6	5.3	6.6	16.2
취약계층지원 등	0.9	1.1	1.3	1.2	0.7	0.9	4.6
공적연금	11.0	12.3	13.8	16.1	17.2	19.0	11.9
보육 · 가족 · 여성	0.2	0.4	0.5	0.7	0.9	1.2	26.6
노인 · 청소년	-	-	-	-	0.6	0.8	19.3
노동	5.8	6.3	6.5	8.2	9.3	10.4	12.9
국가보훈	1.9	2.2	2.4	2.5	2.7	3.0	9.4
주택	10.7	11.3	11.0	13.5	13.5	14.0	1.2
사회복지 일반	-	-	-	0.1	0.2	0.3	22.2
보건분야 합계	-	-	4.8	5.1	5.5	5.3	6.5
보건의료	0.8	0.9	0.9	1.0	1.1	1.0	21.3
건강보험지원	3.2	3.7	3.8	4.0	4.3	4.1	3.7
식품의약품안전	-	-	0.1	0.1	0.2	0.2	9.6
복지재정지출 합계(A)	37.9	41.7	44.2	52.1	56.0	61.4	16.1
정부총지출(B)	-	-	196.2	208.7	224.1	237.1	6.5
총지출대비복지지출비중(A/B)	-	-	22.5 (16.5)	25.0 (18.5)	25.0 (19.0)	25.9 (20.0)	-

자료 : 기획예산처(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국회예산정책처(대한민국 재정 2007, 2007).

주 : 주택부문은 2006년부터 복지재정으로 편입되었으나,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전연도의 재정을 역산하여 복지재정에 포함시킴. ( )안은 주택부문을 제외했을 때의 복지지출의 총지출 대비 비중임.

- (전망) 정부의 「비전 2030」 계획<sup>9)</sup>에 의할 경우에도, 향후 복지재정지출은 빠르게 증가하여 2030년에는 전체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비전 2030」에 제시된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2005년 8.6%(잠정) 수준에서, 이후 연평균 9.8%씩 증가하여 2010년 10.9%, 2020년 15.3%, 2030년 20.6%에 이를 전망<sup>10)</sup>

9) 정부 · 민간 합동작업단,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2006. 8.

- 한국개발연구원은 현재의 복지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를 가정하고 복지제도의 성숙도, 고령화의 진전, 소득수준 향상 등을 고려할 때,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2010년 10.3%, 2020년 14.5%, 2030년 20.6%로 전망하였음<sup>11)</sup>

< 비전 2030에서 발표한 복지재정지출과 관련한 주요 지표 >

(%)

	2005	2020	2030
방과후 활동 수혜율	32	72	75
육아서비스 수혜율	47	67	74
공적연금 수급률	17	47	66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11	70	100
건강보험 보장률	65	80	85
공공임대주택 비율	5	16	16

자료: 정부 · 민간 합동작업단,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2006. 8.

< 참고 > 건강보험 재정을 반영한 복지재정지출 규모

-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은 정부재정에 제한적으로 반영되므로 복지재정지출이 과소하게 계상됨
- 2007년 현재 정부 재정에는 연간 지출액 25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중 약 17%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4.1조 원만 포함되어, 정부 총지출 규모와 보건 분야 지출이 과소 계상됨
- 정부재정에서 제한적으로 반영된 건강보험 지출을 완전히 반영하여 복지재정지출 비중을 산출하면, 보건 분야 10.1%, 사회복지분야 21.7%로, 정부 총지출의 31.9%에 이르게 됨
  - 2007년 건강보험 지출 총 24조 9,635억 원 중 정부재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문 20조 8,286억 원을 반영하면,
  - 보건 분야 26조 1,177억 원, 사회복지 분야 56조 958억 원으로, 복지재정지출은 82조 2,135억 원, 정부 총지출은 257조 9,286억 원으로 추정됨

10) 2001년 현재 미국 15%, 일본 19% 수준.

11) 문형표, 「복지재정 투자의 우선순위 및 정책개선과제,」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KDI, 2004.

### 3. 주요 재정 지표 국제 비교

#### 1) 국제 비교 방법

○ 본 보고서에서 한국과 OECD국가들간의 재정 통계 비교는 ① 국가 특유의 사회 보장 정책에 대한 시각, ② 경제 발전 단계 등을 고려함

- 국가 특유의 사회 보장 정책 시각 고려의 근거 : 전통적으로 사민(社民) 사상이 강한 유럽 지역의 특성을 분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경제 발전 단계 고려의 근거 : 통상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성장을 중시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 비중이 낮고, 이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 재정지출규모 (또는 복지지출)의 대 GDP 비중이 높아지는 특성에 근거함
  - 여기에서는 경제 발전 단계의 기준으로 다소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자료 이용의 한계상 1인당 GDP를 사용함

#### < 참고 > 경제 발전 단계 판별 대리 변수로서의 1인당 GDP의 한계

- 1인당 GDP 기준은 각국 물가수준의 차이로 인한 특정 통화(예를 들면 달러화)의 구매력 차이로 후생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할 경우 1인당 GDP는 해당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1인당 GDP는 건강 상태, 삶의 질 등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후생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함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UN은 기대수명, 문맹률, 교육, 생활수준 등을 반영하는 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보조 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두 가지 기준과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진국 이상 국가들을 3개 국가군으로 구분하고, 이들 국가군과 한국과의 주요 재정 지표들을 분석함

- 국가 분류 : ① 유럽형 선진복지국가, ② 비유럽형 선진국가, ③ 중진국으로 구분  
 · 선진국 기준은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진국은 자료 가용성과 적정수의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해 1만 5,000달러~3만 달러 미만으로 한정함

- 비교 방법

· 최근 추세 비교 : 3가지 국가 분류의 국민부담률(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대 명목GDP 비중), 복지재정비율, 통합재정수지 대 GDP 비율, 국가채무 대 GDP 비율의 수준 및 추이 비교

· 과거 추세 비교 : 자료의 한계상 90년 이후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 도달한 6개 국가에 한정하여 위의 주요 재정 지표 수준 및 추이 비교

※ 6개국은 그리스(2003년 2만 달러 도달), 포르투갈(2006년), 스페인(2003년), 아일랜드(1995년), 뉴질랜드(2003년) 임

< 참고 > 건강보험 재정을 반영한 복지재정지출 규모

- 국가간 복지재정지출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민소득 수준, 노인인구 비중 등 경제·사회적 여건, 공적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재정통계를 단순 비교하면, 현재 한국의 복지재정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7~65% 수준에 불과

- 그러나 한국은 OECD 회원국의 1/6~1/3에 불과한 공적연금의 성숙도,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낮은 노인인구 비중, OECD 평균의 1/3에 못 미치는 1인당 국민소득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본 보고서에서 자료의 제약상 고려하지 못한 연금의 성숙도(maturity ratio)<sup>12)</sup>는 한국의 경우 2007년 현재 4대 공적연금 평균이 12.8%로, OECD 회원국의 1/6~1/3 수준에 불과함

· 한국의 국민연금 성숙도는 11.9%(2007 기준), 공무원연금 24.7%(2007), 국민연금 16.2%(2011)에 불과

· 선진국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29.5%(2005), 스웨덴 소득연계연금 29.5%(2003), 캐나다 국민연금 40%(2004), 일본 후생연금 69%(2006), 프랑스 일반연금 66% 및 공무원연금 82%(2006) 등에 달하고 있음

2) 국가군별 최근 주요 재정 지표 추이 (2000년 이후)

○ 유럽형 선진복지국가

- (국민부담률) 2005년 기준 1인당 GDP가 모두 3만 달러대에 위치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4개국의 국민부담률은 2005년 현재 30%대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복지재정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인 북유럽에 위치한 스웨덴 51.1%, 프랑스 44.4%, 영국 36.7%, 독일 34.8%의 국민부담률을 나타냄
- 그러나 4개국 모두는 2000년과 비교할 경우 추세적으로 국민부담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0~2005년 기간 동안 국민부담률은 4개국 평균 약 1.6%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복지재정비율) 2005년 기준 1인당 GDP가 모두 3만 달러대에 위치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4개국의 복지재정비율은 2004년 현재 50%대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통합재정수지비율) 이들 국가의 통합재정수지의 대 GDP 비율은 2005년 현재 3%대 이상의 높은 적자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스웨덴은 이례적으로 2005년 현재 2.8%의 흑자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국가채무비율) 이들 국가의 국가채무의 대 GDP 비율은 2005년 현재 45%대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비유럽형 선진국가

- (국민부담률) 유럽형과는 달리 비유럽형 선진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현재 국민부담률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26%대를 기록하고 있음
  - 미국의 2005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26.8%, 일본은 26.3%로 한국의 2005년

4) 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수 비중을 의미함.

기준 25.6%, 2006년의 26.7%와 비슷한 모습을 나타냄

- 이들 국가의 국민부담률도 2000년과 비교할 경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5년 동안의 축소폭은 양국가 평균 약 1.1%p임

- (복지재정비율) 미국은 2005년 현재 50%대 이상의 높은 복지재정비율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통합재정수지비율) 미국과 일본의 통합재정수지의 대 GDP 비율은 2005년 현재 각각 3.7%, 4.8% 높은 적자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국가채무비율) 2005년 현재 국가채무의 대 GDP 비율은 미국이 61.8%, 일본은 무려 173.1%의 매우 높은 적자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 중진국

- (국민부담률) 2005년 현재 한국과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지는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을 살펴보면, 10%대에서 30%대 중반의 국민부담률을 나타내고 있음
  - 포르투갈, 스페인, 뉴질랜드는 2005년 현재 각각 34.2%, 36.3%, 36.8%의 국민부담률을 기록함
  - 그리스는 유럽 국가이면서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27.7%를 나타냄
  - 아시아 경쟁국인 대만은 14.1%에 불과하여 한국의 25.6%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함
- (복지재정비율) 이들 국가들은 2004년 현재 40%대 이상의 높은 복지재정비율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통합재정수지비율) 이들 국가 통합재정수지의 대 GDP 비율은 2004년 현재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적자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경우 재정개혁을 통해 2004년 5.8%의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국가채무비율) 이들 국가의 2005년 현재 국가채무의 대 GDP 비율은 대만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50%대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그리스의 경우 124.2%의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뉴질랜드와 대만의 비율은 28.2%와 36.1%로 한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국가 군별 최근 재정부담지표 추이 >

(단위 : %,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국민부담률	23.6	24.1	24.4	25.3	24.6	25.6	26.7	
	복지재정비율	17.5	14.8	17.2	13.9	22.5	25.0	25.0	
	통합재정수지	1.1	1.2	3.3	1.1	0.7	0.4	0.4	
	국가채무비율	19.2	19.6	19.5	23.0	26.1	30.7	33.4	
	1인당 GDP	10938	10243	11568	12806	14271	16454	18164	
유럽형선진국	프랑스	국민부담률	44.4	44.0	43.4	43.1	43.4	44.4	-
		복지재정비율	61.3	61.4	61.3	62.0	61.9	-	-
		통합재정수지	-1.6	-1.6	-3.2	-4.2	-3.7	-2.9	-2.6
		국가채무비율	65.2	63.8	66.8	71.0	73.3	76.1	75.3
		1인당 GDP	21812	21887	23662	29030	33005	33862	35375
	북유럽	국민부담률	37.2	36.1	35.4	35.5	34.7	34.8	-
		복지재정비율	-	-	-	86.5	86.9	88.0	-
		통합재정수지	1.3	-2.8	-3.7	-4.0	-3.7	-3.2	-1.7
		국가채무비율	60.4	59.7	62.1	65.4	68.8	71.1	71.3
		1인당 GDP	23086	22950	24453	29546	33168	33718	34955
	스웨덴	국민부담률	53.4	51.3	49.7	50.1	50.4	51.1	-
		복지재정비율	42.6	53.7	50.1	52.3	52.6	-	-
		통합재정수지	5.0	2.6	-0.5	-0.2	1.6	2.8	2.8
		국가채무비율	63.9	62.9	59.8	59.3	58.9	59.5	56.0
		1인당 GDP	27290	24922	27305	33955	38792	39539	42170
영국	국민부담률	37.2	37.0	35.5	35.4	36.0	36.7	-	
	복지재정비율	51.8	52.4	52.5	52.5	52.0	51.9	-	
	통합재정수지	1.7	1.1	-1.6	-3.2	-3.1	-3.0	-2.5	
	국가채무비율	45.7	41.0	41.3	41.8	43.7	46.7	47.9	
	1인당 GDP	24500	24278	26467	30378	35923	36954	39207	
비유럽형선진국	미국	국민부담률	29.9	28.8	26.5	25.7	25.5	26.8	-
		복지재정비율	48.8	54.7	56.0	55.5	55.1	54.2	-
		통합재정수지	1.6	-0.4	-3.8	-4.8	-4.6	-3.7	-2.6
		국가채무비율	55.2	55.2	57.5	60.8	61.6	61.8	60.9
		1인당 GDP	34280	35006	35820	37123	39271	41348	43562
	일본	국민부담률	27.1	27.3	26.2	20.4	19.5	26.3	-
		복지재정비율	-	-	-	-	-	-	-
		통합재정수지	-7.6	-6.3	-8.0	-8.0	-6.2	-4.8	-4.3
		국가채무비율	137.1	145.2	154.0	160.2	168.1	173.1	176.2
		1인당 GDP	36601	32118	30630	33145	35876	35646	34461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중 기 반 단	포르투갈	국민부담률	34.1	33.8	34.5	35.0	34.5	34.2	-
		복지재정비율	-	48.5	50.3	48.4	49.9	-	-
		통합재정수지	-2.7	-4.3	-4.2	-5.2	-5.3	-5.7	-3.9
		국가채무비율	60.2	61.6	65.0	66.4	68.4	72.8	74.3
		1인당 GDP	11015	11251	12319	14910	17013	17457	18129
	스페인	국민부담률	34.2	33.8	34.2	34.3	34.8	36.3	-
		복지재정비율	43.6	43.7	45.7	45.5	44.6	-	-
		통합재정수지	-0.9	-0.5	-0.3	-	-0.2	1.1	1.8
		국가채무비율	66.2	61.6	59.8	59.3	58.9	59.5	56.0
		1인당 GDP	14434	14950	16581	20977	24375	25947	27913
	뉴질랜드	국민부담률	33.6	33.0	34.6	34.4	35.6	36.8	-
		복지재정비율	-	-	-	-	53.4	52.4	-
		통합재정수지	1.2	1.6	1.7	3.4	4.6	5.8	5.6
		국가채무비율	37.4	35.4	33.6	31.7	29.1	28.2	29.8
		1인당 GDP	13667	13439	15309	20171			
	그리스	국민부담률	37.3	36.2	37.2	36.3	35.0	27.7	-
		복지재정비율	44.5	47.0	47.9	49.4	47.7	-	-
		통합재정수지	-3.2	-3.9	-4.1	-4.9	-6.2	-4.2	-2.1
		국가채무비율	127.2	131.2	129.5	126.1	127.3	124.2	120.6
		1인당 GDP	13299	13653	15432	20063	23842	25562	27679
대만	국민부담률	14.0	13.2	12.6	12.7	12.9	14.1	-	
	복지재정비율	-	-	-	-	-	-	-	
	통합재정수지	-4.5	-6.4	-4.3	-2.8	-2.9	-0.6	-0.5	
	국가채무비율	-	-	-	-	-	36.1	36.8	
	1인당 GDP	14418	13018	13091	13253	14201	15213	15565	

자료 : OECD 재정수입통계, 2006.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World Bank, GDP per capita.

국회예산정책처.

주 : 1) 한국 재정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인용.

2) 외국 국민부담률은 2004년까지는 OECD 자료, 그 이후는 IMD 자료.

3) 대만을 제외한 외국의 국가채무 GDP 비율은 OECD 자료, 대만 국가채무 GDP 비율은 IMD 자료.

4) 1인당 GDP는 PPP로 환산한 미 달러 경상가격

3) OECD국가들의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전의 국민부담률 추이

○ OECD 국가들 중 자료의 한계상 90년 이후 1인당 GDP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현 한국의 소득 수준인 1만 8,000달러대 도달 직전 5개연도의 국민부담률은 대체로 30%대 초중반을 기록

- 그러나 1만 8,000달러 도달 시기와 5년 전의 국민부담률 변화폭을 고려해 볼 경우, 그리스와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냄

·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우에도 각각 1.9%p와 1.8%p 증가에 그쳐 한국의 2.3%p 증가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90년대 이후 1인당 GDP 2만 달러 도달 국가의 국민부담률 추이 >

(단위 : %, 달러, %p)

한국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민부담률 차이 (2006-2002)
	국민부담률	24.4	25.3	24.6	25.6	26.7	2.3
	1인당 GDP	11568	12806	14271	16454	18164	
그리스 (2003)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국민부담률 차이 (2003-1999)
	국민부담률	34.0	37.5	40.6	34.7	35.9	1.9
	1인당 GDP	14783	13299	13653	15432	20063	
포르투갈 (2006)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민부담률 차이 (2005-2002)
	국민부담률	34.0	34.2	35.2	34.2	-	0.2
	1인당 GDP	12319	14910	17013	17457	18129	
스페인 (2003)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국민부담률 차이 (2003-1999)
	국민부담률	33.9	35.1	35.1	35.5	35.7	1.8
	1인당 GDP	15494	14434	14950	16581	20977	
아일랜드 (1995)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국민부담률 차이 (1995-1991)
	국민부담률	33.7	34.0	34.0	35.1	32.5	-1.2
	1인당 GDP	13723	15352	14305	15474	18595	
뉴질랜드 (2003)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국민부담률 차이 (2003-1999)
	국민부담률	36.6	34.8	35.0	33.4	33.4	-3.2
	1인당 GDP	15215	13667	13439	15309	20171	

자료 : OECD 재정수입통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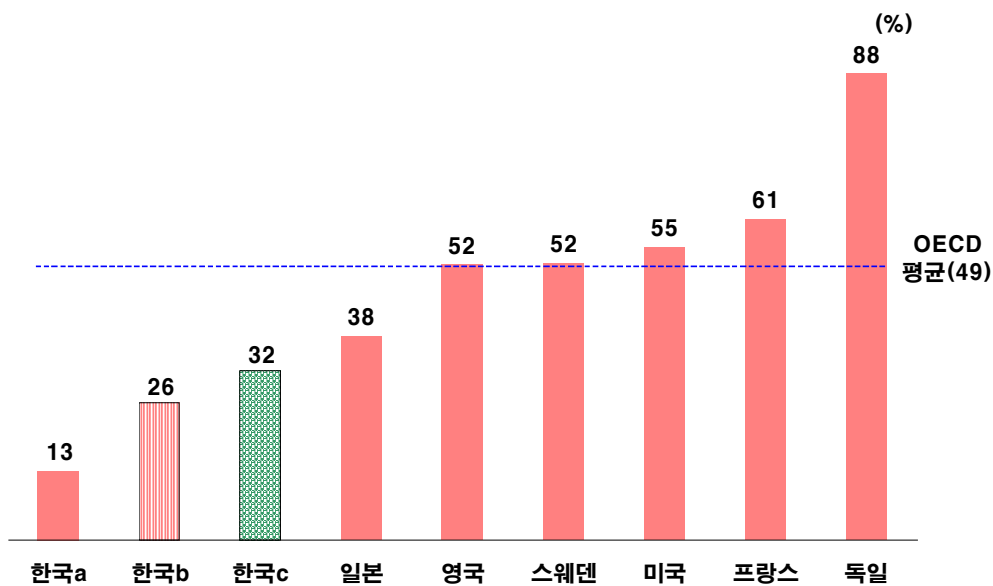
OECD Factbook 2006: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2006.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참고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간 복지재정지출 규모 비교

- IMF 통계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이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3%(2005년)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9%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복지재정지출 중 보건비 지출 (health expenditure) 비중은 한국이 0.4%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임 (OECD 평균 11.8%)
- 사회복지비 지출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비중은 12.7%로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낮음 (OECD 평균 37.2%)

< 주요 OECD 회원국의 복지재정지출/총재정지출 비중 비교 >



자료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2006.  
기획예산처, 「2007 나라살림: 예산개요」, 2007.

- 주 : 1) 중앙정부재정 대비 복지재정지출(social protection + health) 비중  
 2) 기준년도: 한국a(2005 잠정치, IMF통계), 한국b(2007, 정부통계), 한국c(2007, 정부통계+건강보험재정), 일본(1993), 영국(1999), 스웨덴(2003), 미국(2005), 프랑스(1993), 독일(2005)  
 3) 일반정부 기준시 : 스웨덴(2003) 55%, 일본(2004) 52%, 영국(2005) 52%, 프랑스(2005) 56%  
 4) OECD 평균: 회원국에 따라 1993~2005년 중앙정부통계 적용.



#### 4) 국제 비교에 대한 평가

-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이는 회원국들 대부분이 전통적으로 사민(社民) 사상이 강한 유럽형 선진복지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반면 미국, 일본 등의 비유럽형 선진국가들과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최근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부담률의 빠른 증가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 성장에 이용될 수 있는 자원이 축소되어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음
  - 다만 이러한 부담률 상승 추세는 우리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유럽형 복지국가 수준을 따라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음
-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예산정책처가 IMF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이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3%(2005년)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9%(2004년)와 큰 격차를 보임
-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들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2006년 현재 GDP의 0.4%로, 지금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

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국가부채비율도 2005년 현재 30.7%로 미국 61.8%, 영국46.7%, 일본 173.1%보다 낮을 뿐더러, 경쟁국인 대만의 36.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과거 OECD 국가들의 국민 소득이 현재 한국의 수준과 비슷한 시기의 국민부담률을 비교할 경우, 역시 한국의 부담률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료의 한계상 OECD 국가들 중 90년 이후 1인당 GDP가 1만 8,000달러(현재 한국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의 도달 시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수준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음
- 그러나 1만 8,000달러 도달 시점 5년 동안 이들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감소하거나 증가하더라도 한국의 증가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4. 정책적 시사점

○ (재정건전성 악화의 문제점) 급격하게 증가하는 복지재정지출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여 인구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함께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할 경우 이는 국가채무 증대와 국민의 조세부담 증대로 이어지고, 나아가 미래에는 현재 선진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재정정책의 효과성 저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향후 재정지출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급증, 신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계획,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국방비 증액, 통일 비용 등 신규 재정 수요 확대에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 (정책적 시사점) 중장기 재정 정책의 기본 방향은 현실적인 경제의 성장 잠재력, 통일 비용, 빠른 인구 고령화 등과 같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미래 세대에 이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크게 축소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생산적 복지’ 정책으로의 전환 : 복지 정책 방향은 국가 주도의 ‘사회적 복지’에서 취약계층의 노동능력 제고와 기업 활동 활성화에 의한 ‘생산적 복지’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보육 등 성장 동반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SOC 투자 확대, 신산업 육성, 연구개발 투자 등 미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을 높여야 할 것임
  - 재정 지출의 무분별한 증대 억제를 위한 제도 구축 : 총재정지출에 일정한 상한선 강제, 중장기 재정 지출 계획들을 재검토 및 우선순위 재선정 등이 요구됨
    - 총재정지출에 일정한 상한선을 두는 재정 규율을 법제화하여 재정지출 확장을 제한하고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함
    - 현재 중장기 재정 지출 계획들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현재의 경제 체력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출 규모가 큰 분야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재원 투입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수 증대 방안 모색 : 국민부담률을 높이지 않으면서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함
    -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을 통한 세수기반 증대가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세수기반 증대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충이 불가피할 경우 조세행정 상 손쉬운 세율 인상보다는 지하 경제의 축소 노력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탈세(지하경제) 및 체납을 축소를 위해, 세무 인력의 확충, 탈세 고발 시스템 점검 등의 국세 행정력 강화가 필요

- 복지 재정 지출의 실효성 확보 : 재정 지출 분야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복지 재정 지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복지 지출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가 풀 구성, 지출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취약 부문에 대한 제도 보완이 상시화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전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육·기초생활급여 등의 지출 급증 부문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권 제도(바우처) 등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임

강 대 창 연구위원 (3669-4457, dkang@hri.co.kr)

월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7월 경상수지 16.4억 달러 흑자

- 7월 중 경상수지는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상품수지의 흑자폭도 소폭 감소되었으나 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전월보다 3.6억 달러 증가한 16.4억 달러 흑자를 나타냄
  - 상품수지는 수출(전년동월대비 17.8%)이 호조를 보였으나 수입(14.5%)도 크게 늘어나 흑자규모가 전월보다 0.8억 달러 줄어든 31.3억 달러 흑자를 보임
  - 반면 서비스수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여행수지 적자(15억 5천만 달러) 확대로 적자규모가 전월보다 1.7억 달러 늘어난 16.9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냄
  - 한편 소득수지는 대외배당금 지급과 이자지급이 감소한 데다가 이자수입은 증가하여 전월의 3백만 달러 적자에서 5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되어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에 기여하였음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5.1(0.8)	4.8(1.2)	4.0(0.9)	4.0(0.9)	4.9(1.7)	-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6.1	2.9	4.5	7.1	5.3	4.8	9.8
		설비투자추계	6.3	7.4	6.7	11.8	5.1	11.3	12.1	9.2	1.3
		건설수주	7.3	9.0	-14.7	37.1	27.1	26.3	26.3	28.8	-14.9
		수출	12.0	14.4	16.9	16.3	13.8	14.6	14.4	15.3	20.0
	공급	산업생산	6.3	10.1	11.5	11.3	5.2	3.3	7.1	7.7	14.3
		취업지수(만명)	2,286	2,315	2,341	2,331	2,330	2,284	2,370	2,382	2,375
		실업률(%)	3.7	3.5	3.4	3.3	3.2	3.6	3.2	3.2	3.2
수입		16.4	18.4	20.4	21.1	13.0	13.3	14.3	9.3	14.9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166	61	7	4	61	-17	2	13	16	
	무역수지(억\$)	232	161	48	25	75	25	56	38	16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2	2.5	2.1	2.0	2.4	2.5	2.5	
	생산자물가	2.1	2.3	2.5	3.1	2.0	1.8	2.5	2.7	2.4	
	생산재물가	3.9	4.8	6.1	5.8	1.8	2.1	3.3	2.8	1.9	
	최종재물가	0.3	0.5	0.3	0.6	0.4	0.3	1.1	1.2	0.7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금리 상승 속, 주가 및 환율의 급등락

○ (해외 금융 시장)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제 금리 하락

- 금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불실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감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전월말 대비 크게 하락 (국채 10년물 : 4.74%→ 4.51%)
- 환율: 달러화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영향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부 청산됨에 따라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고, 유럽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에 따른 영향으로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보합세를 시현 (\$/€ : 1.3683→1.3625, ¥/\$ :118.6→115.9)

○ (국내 금융 시장) 금리의 상승 속, 주가 및 환율의 급등락

- 주가: 미국발 신용경색 위기감으로 1,638.1p까지 급락하였으나, 각국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등에 따른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면서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나 전월말 대비 크게 하락 (1,933.4→1,873.2)
- 금리: 시중 과잉 유동성을 우려한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4.75→5.00%) 및 국내 경기 지표의 호조 등에 따른 영향으로 전월말 대비 대폭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5.22%→5.39%)
- 환율: 미국의 신용경색 우려로 일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하는 가운데 역외 세력들의 달러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950원까지 상승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나 전월말 대비 대폭 상승 (919.3→938.3원)

○ (전망) 금리의 단기 급등으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소폭 하락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1/4	2/4	3/4	4/4	1/4	2/4	7.31	8.31 <sup>1)</sup>
국내	거래소 주가	1,359.6	1,295.2	1,371.4	1,434.5	1,452.5	1,743.6	1,933.4	1,873.2
	국고채3년(%)	4.93	4.92	4.57	4.92	4.76	5.26	5.22	5.39
	원/달러	971.6	948.9	946.2	929.8	940.9	923.8	919.3	938.3
해외	DOW	11,109	11,150	11,679	12,463	12,354	13,409	13,212	13,239
	Nikkei	17,060	15,505	16,128	17,226	17,288	18,138	17,249	16,154
	미국채10년(%)	4.85	5.14	4.63	4.70	4.57	5.02	4.74	4.51
	일본채10년(%)	1.78	1.93	1.68	1.69	1.60	1.88	1.80	1.58
	달러/유로	1.2118	1.2790	1.2674	1.3199	1.3354	1.3542	1.3683	1.3625
	엔/달러	117.78	114.42	118.18	119.07	117.83	123.18	118.60	115.86
	두바이(\$/바렐)	59.16	67.17	57.33	56.71	63.12	66.42	69.44	68.06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8.30) 기준